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2021 | 통권 제 184호

강원 의정



표지설명: 위는 왼쪽부터 동강 아라연, 오른쪽 운곡 원천석 유적 태종대, 아래는 장릉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자치분권 2.0시대

강원도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함께 해요!





강원도의회 의원현황

CONTENTS

04

인사말

· 강원도의회 의장

제301회 정례회

06

의회 핫이슈

· 독도,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종жат대 규탄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08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원수첩

· 이종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2)
· 권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6)
· 주대하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1)
· 신영재 의원(국민의힘·홍천1)
·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태백2)
·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영월2)

02

04

06

10

16

26

30

조례 Q&A

연구회 탐방

· 전통시장 살리기 연구회

뉴스 포커스

포토 포커스

언론 속 의정

강원 인문학

· 운곡 원천석 유적 태종대
· 문정공 조충지석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
· 동강 어라연

도의회 연간 일정

도의회 자료실

42

46

48

50

52

54

58

60

강원 의정

GANGWON · PROVINCIAL · COUNCIL · JOURNAL

2021 Vol.184

통권 184호 | 2021년

48



51



54



57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강원도의회 의정소식지인 '강원의정'에서는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발행일 | 2021년 7월 9일
발행처 | 강원도의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발행인 | 강원도의회 의장 박도영
편집인 |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고영선
기획 | 강원도의회 홍보담당관
문의 | Tel. 033)249-5169 / Fax. 033)249-5023

도민들의 전진을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이 밝아온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도민 여러분, 올 한해의 절반은 어떠하셨습니까?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연장 등 강원도에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개개 가정에서는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상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인다 싶으면 안타깝게도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염력이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예방 효과는 90% 내외입니다. 그러므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책은 백신과 마스크입니다. 백신을 조기 접종하는 한편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 전염에 대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녕은 도의 평화와 발전과 직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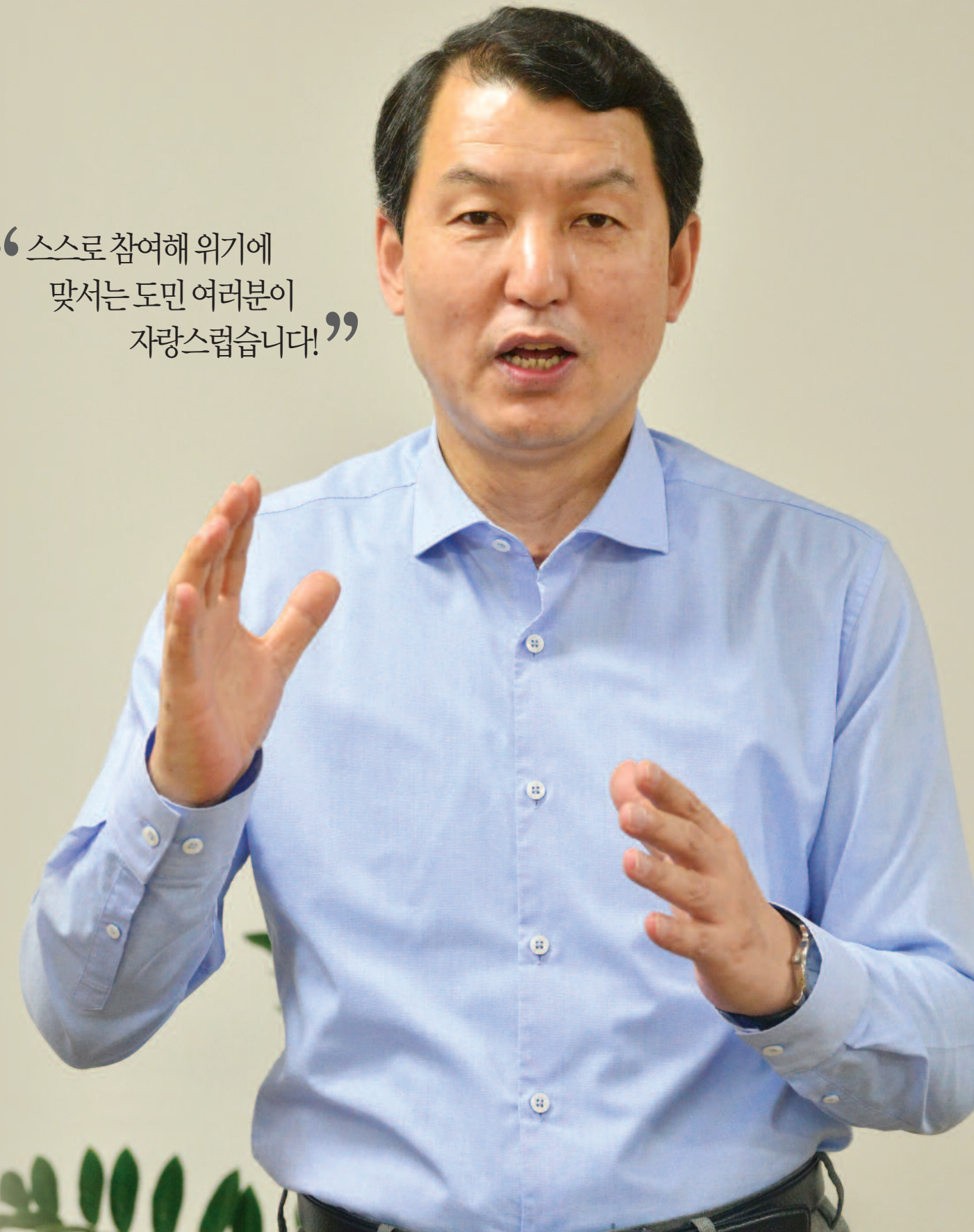
우리는 70년 전에도 위기로부터 국가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래 3년 간 전쟁이 이어지며 죄없는 민간인들이 끔찍하게 학살되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는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이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쟁 희생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도민들은 전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태백에서는 마을 주민 등 민간이 함께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춘천 시민들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선과 속초에서는 배달앱 ‘일단시켜’가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는 4차산업에 도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를 피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의회가 도민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

“ 스스로 참여해 위기에
맞서는 도민 여러분이
자랑스롭습니다! ”





2021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AM 사업 투자 등 도내 현안 집중 질의

강원도의회는 6월 1일 제301회 정례회를 열고 6월 16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기에는 4차에 걸쳐 본회의가 열렸고 2021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었으며 2020 회계연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했고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또 「대한민국 고유영토 '독도'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종жат대 규탄 성명'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민생 관련 사업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살펴볼 것”

곽도영 도의장(더불어민주당·원주5)은 제1차 본회의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19는 도민과 관계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도의회는 연초 계획했던 각종 민생 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문제 사업이나 부진한 시책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대안 제시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재연 의원(국민의힘·철원1)은 멈춰져 있는 경원선 복원사업의 재개를 희망하며 철원지역 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추진하는 기간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주문하였다. 김상용 의원(더불어민주당·삼척1)은 수소에너지경제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도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수소 산업 중심지가 삼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인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2)은 “강원도는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종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2)은 “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강원도 내 2곳의 항구에서 독도에 갈 수 있는 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용 의원(더불어민주당·삼척1)은 “태백 도계와 삼척 미로를 연결하는 38국도를 조속히 완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심상화 의원(국민의 힘·동해1)은 이념을 넘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은 “최근 트레일러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에서 산림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에서 김경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월1)은 UAM(도심항공교통) 사업 투자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으며 정유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내 돌봄센터 운영에 대해 지적하였다.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태백2)은 탄소 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신영재 의원(국민의힘·홍천1)은 용문~홍천 간 철도 사업방식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최종희 의원(국민의 힘·비례)은 도내 일자리 문제와 인구 문제에 대해 논하였고 심영섭 의원(국민의힘·강릉1)은 강릉화산초 신설 등 교육문제를 질의하였다. 한금석 의원(더불어민주당·철원2)은 접경지원 지원에 대해 강조하였고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학습종합클리닉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권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6)은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고 김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동해2)은 강원도 방역시스템과 플라이강원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2020회계연도 도 및 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부서의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였고 현지 시찰을 진행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강원도의회(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예산결산안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인재육성재단, 해솔직업사관학교 등을 시찰하였고, 사회문화위원회는 반야지역자활센터, 보치아 직장운동 경기부 훈련장, 속초의 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정 부지, 고성 DMZ 박물관을 시찰하였다.

농림수산위원회는 평창에 소재한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원주의 강원도자연학습원을 시찰하였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강원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받았으며 강원디자인진흥원을 시찰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양양에 소재한 강원국제교육원, 속초중학

교 이전 예정 검토 부지, 강원진로교육원 등을 시찰하였다.

예산결산안특별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20 회계연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0회계연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 기금 결산안을 심의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가결하였다.

회기에 상정된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은 「강원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아동·청소년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모두 9건이었으며 7건이 가결되었다.

제301회 도의회 정례회는 6월 1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시도는 불법이다

대한민국 고유영토 '독도'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중잣대 규탄 성명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일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자 각지에서 규탄 성명이 빗발치고 있다. 강원도의회도 '대한민국 고유영토 '독도'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중잣대 규탄' 성명을 내고 국제올림픽위원회를 규탄했다.

앞서 대한민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하는 것을 두고 일본이 반발하자 독도 표기를 삭제하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를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20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홈페이지에 독도가 마치 일본 영토인 양 표기를 해놓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일본 지도에 독도 표기를 하는것은 국제적 정치 행위이자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항의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단순한 지리상의 표시”라며 일본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내·국제 정치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2021년판 외교 총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고 일본 자위대 홍보 영상에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묘사했다.

이에 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전세계 청소년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올림픽을 이용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시도의 불법성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전달하며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국제정치 속 대결의 격랑 속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인류의 화합이라는 본래의 가치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성명서

대한민국 고유영토 '독도'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중잣대 규탄

강원도에서 개최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전 세계인에 전한 역대 최고의 올림픽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평화의 상징인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를 두고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국민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화합 증진에 기여하는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사명감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독도 표기 삭제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 삭제라는 우리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태도에 실망감과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번 독도 표기 문제는 올림픽을 이용한 국제적 정치 행위이자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임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중재는 커녕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지난 6월 11일 공식적으로 밝혀온 것은 그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강조해온 올림픽 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독도 표기를 단순한 지리상의 표시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일본은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내·국제정치에 활용해 왔다.

2021년 들어, 스가정부는 국내적으로 전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도쿄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를 강행하고 있으며 2021년판 외교총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고 일본 자위대 홍보 영상에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하는 등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전세계 청소년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올림픽을 이용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시도의 불법성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전달하며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국제정치 속 대결의 격랑 속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인류의 화합이라는 본래의 가치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6월 16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공정의 실현, 평화의 약속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발표

강원도의회는 6월 16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에 결의문을 송부하였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올 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70년간 분단된 대한민국의 변방으로 전략해 희생해 온 강원도는 새로운 평화의 성장동력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해 왔다.

도의회는 이번에 결의문을 내고 “강원도는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남북을 잇는 한반도의 핵심으로, 그리고 북방진출 교두보라는 이점을 통해 북방경제의 중심이 될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평화유산과 지리적 조건을 발판으로, 강원도는 북방경제로 뻗어나가 평화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전략의 실현 비전이 바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의 의미를 “공정의 실현이자 평화 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원도가 각종 규제와 남북 간 대결로 인한 낙후와 침체, 소외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국토 균형발전과 평화경제를 실현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강원도가 냉전과 갈등의 지대에서 평화지대로 거듭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를 결의했다.



결의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강원도는 분단 이후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된 각종 군사 규제와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원도는 평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2000년부터 남북교류를 선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강원도는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남북을 잇는 한반도의 핵심으로, 그리고 북방진출 교두보라는 이점을 통해 북방경제의 중심이 될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유산과 지리적 조건을 발판으로, 강원도는 북방경제로 뻗어나가 평화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전략의 실현 비전이 바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의 실현이자 평화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이러한 강원도민의 염원과 대한민국의 신성장 전략인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 154만 강원도민과 200만 출향도민을 대표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강원도가 각종 규제와 남북 간 대결로 인한 낙후와 침체, 소외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국토 균형발전과 평화경제를 실현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 강원도가 냉전과 갈등의 지대에서 평화지대로 거듭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6월 16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6월 1일 제30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제30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통해 다음번 회기를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본 기간 중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처리 안건

- 제30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는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여 이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301회기 중 3일간 2021년도 제2차 도정질문이 실시되었으며, 제10대 강원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상정하고 235억 원 규모의 결산을 심의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규호



도 금고 운영에 친환경 산업 투자실적 반영 권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규호)는 6월 2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6월 8일까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결산안 6건을 심사하였다.

2020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는 사업별 집행잔액, 이월 사유 등을 점검하여,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6월 2일에는 감사위원회, 소방본부 및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6월 3일에는 총무행정관 소관 결산 심사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특히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조문의 문구 및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6월 8일에는 재난안전실 및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강원도 금고 지정 평가 시 친환경 산업 투자실적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다.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장덕수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인력 확보 대책 주문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장덕수)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의하였다.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핵심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정리를 강조하며 원안가결하였다.

대변인실 소관 심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강원도에 대한 국내외의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과 적극적 도정 홍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원안가결하였다.

문화관광체육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방역관리 등 보건·안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다.

보건복지여성국 심의에서는 도내 유일의 여성과 가족 관련 연구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이 연구인력이 부족하여 매년 10%가 넘는 인건비와 연구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연구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원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6월 4일에는 속초지역 체육·복지시설 사업 점검 및 관광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현지시찰을 하였다.

주요처리 안건

-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 강원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산채연구원에 코로나 상품 개발 주문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과 5개 국·원·본부의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을 심사·의결하고,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와 강원도자연학습원을 현지시찰 하였다.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투명한 분양과정의 확립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수산종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

농수위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에서는 소관 사업소별 인건비 불용액 발생원인 파악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 세입도 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당부하며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6월 8일에는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주요 업무추진 상황 및 현안을 보고 받고, 주요 시설을 시찰하였다.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에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 개발을 주문하였고, 강원도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해 강원도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것을 녹색국에 주문하였다.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5개 국·원·본부)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원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관련 조례 가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형원)는 6월 2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윤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 글로벌투자통상국 및 경제진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였다.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일부조항을 삭제·변경·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6월 3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였다. 6월 4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열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첨단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였다.

6월 9일에는 강원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보고 받고, 강원디자인진흥원 현지시찰을 통해 디자인진흥원 시설 및 전시회 견학과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
-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 강원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도의회 설명회(도의회)
- 강원디자인진흥원 현지 시찰(춘천)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재연



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결과 효율성 제고 노력 평가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연)는 6월 2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6월 7일 강원국제교육원을 방문하여 2021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속초중학교 이전 예정 검토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 남부권 중학교 신설 이전을 위한 설립 검토 부지를 현장 확인하였다. 이어 강원도 진로교육 전문 교육행정기관인 강원진로교육원을 방문해 학생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진로 체험 교육시설 운용실태를 현장 점검하였다.

또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결산액은 3조 3,499억 2,2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 2,586억 9,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전년대비 304억 8,800만원 감소한 520억 2,800만원이다. 특히, 불용률(1.55%)과 이월률(1.16%)이 최근 4년(2017년~20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예산의 이용 없이 전용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 지출 승인의 건
-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 강원국제교육원 현지시찰(양양)
- 속초중학교 이전 예정 검토 부지 현지시찰(속초)
- 강원진로교육원 현지시찰(춘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1.6.14



김 경 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영월1

Q 이번 추경예산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UAM 시제기 개발이 승객을 실어 나르는 UAM 개발 사업인지?

A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우선 1차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UAM이고 시제기가 개발되면 좀 더 확대해 특수목적 UAM도 함께 개발할 계획임.

Q 특수한 목적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A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사람 외의 화물과 응급의료, 재난 대응, 군사용, 농업용 등 다양한 분야임.

Q UAM 투자심의 요청에 따라 제출했던 서류를 보면 드론택시 상용화로 돈을 벌겠다고 되어있는데?

A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기본적으로 드론 택시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여 당시에는 승객용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강원도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또 여러 가지 특수목적용으로도 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내용이 확대되었음.

Q UAM 개발사업 기체의 스펙은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기체인데 특수목적용과 병행하여 두 가지를 다 개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의 한 가지를 개발한다는 것인지?

A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지금은 2인승 유인 드론을 먼저 생산하는 것이고 이후 테스트 과정을 거쳐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상용기 개발단계에서 여러 가지 고려도 할 수 있다는 것임.
지금 271억 원으로 하는 것은 우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임, 생산 이후 상용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특수목적용을 개발한다는 것이지 현재 개발하는 것 자체를 특수목적용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님.

Q 그러면 다시 특수목적용 시제기를 개발할 때 도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건지?

A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우선 드론 택시를 개발하고 시제품으로 완벽하게 된다면 여러 기업에서 상당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하고 있음.

Q UAM사업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 결과가 어떤지?

A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국토부, 산업부에서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

Q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과 PAV(개인용 항공모빌리티)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액화수소 연료전지도 산업부에서 300kW급 연료전지 카고드론산업과 중복이 돼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과인 것 같은데?

A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사업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 인천, 광주광역시에서도 드론 택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시작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 것으로 보임. 전남 고흥에 테스트베드가 있지만 드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테스트 받으려 고흥까지 가야 하는 문제도 있음. 고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서너 개 정도는 충분히 설치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

Q 향후 펀드 등 투자 사업의 금액 규모, 사업의 적정성 등 기준을 정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투자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A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강원형 뉴딜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음.

Q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초등학생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음. 얼마 전 “강원도 ‘초등학생도 책임집니다’ 광역 최초 돌봄센터 개소”라는 보도로 초등학생의 돌봄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

A **총무행정관 박광용** : 현재 10개 시군에서 2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Q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는 범이곰이 돌봄센터와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것이 공무원 복지 차원이 다 하는데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A **총무행정관 박광용** :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이 일단 큰 부분이었고, 지금 거기에서 춘천시 거주취약계층 부분까지 운영하고 있음.

Q 돌봄 대상의 확대는 총원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가정의 아동을 10% 정도 총원하는 것이 강원도에서 내세우고 있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방안인지?

A **총무행정관 박광용** : 그것은 저희 파트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일반 복지파트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아야 함.

Q 범이곰이돌봄센터 전체 정원을 1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고 총원의 10%라고 얘기하는데,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은 몇 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는지?

A **총무행정관 박광용** : 4월 기준 36명이고 취약계층 자녀는 현재까지 없음.

Q 2019년 당초 예산 심의 때 250명 가량의 대상자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돌봄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36명의 자녀만 다니고 있는 이유는?

A **총무행정관 박광용** : 범이곰이 돌봄센터가 지난 4월에 오



정 유 선 의원
교육위원회·비례

픈했고 아동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음.

Q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95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사교육이나 민간업체를 이용하고 있음. 강원도 내 맞벌이 가족이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종지만 공무원 자녀의 돌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도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시군과 기업 공공기관들도 다 같이 해야 함.

Q 학부모님의 생각과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고민해서 교육청과 함께 2018년의 협약 이후에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도지사 최문순** : 잘 안될 때는 발상을 바꾸고 방법을 바꿔야 함. 잘되도록 하겠음.

Q 정신건강 영역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이·통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보신다면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A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자살 예방교육 시책을 시행해 봤는데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개선 후 확대해 나가겠음.



김혁동 의원
교육위원회·태백2

Q 현재 석탄산업 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하는데 석탄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A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 도에서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최소한 2개 정도의 탄광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고, 특히 석탄 수급 관련해서는 국내 석탄 수요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석탄 생산이 지속돼야 하고 정책상 불가피하게 감산, 폐광이 이루어진다면 석탄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강원 남부권, 현재 폐광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에 대체산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음.

Q 화석연료를 없애고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없다고 보이고, 태백과 삼척의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A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석탄산업 장기계획과 폐광지역 중·장기계획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만약 폐광이 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산업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음.

Q 탄소 중립 동참 분위기로 석탄산업의 붕괴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원 남부, 특히 태백 탄광지역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준비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석탄산업법 제4장의 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의견은?

A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 태백은 에너지 중심의 대체산업으로 액화수소산업, 플라스마 발전단지, 무연탄을 활용한 인조흑연이나 탄소소재 산업, 폐경석을 활용한 원료화 산업 등도 차원에서 이 산업들에 대해 R&D를 착수했음. 향후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인데, 투 트랙으로 도 차원의 자구책도 마련하겠음.

Q 365세이프타운을 국립으로 지정하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도록 직접 정부에 건의해 주실 수 있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2014년 이후 그대로인데 지금은 큰 그림

을 그리고 있음. 국가 소방학교와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휴양·치유도시를 위해서라도 큰 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태백시와도 협의하고, 정부에서 비용을 내기 좋은 그림을 그려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음.

Q 태백 학도병기념관을 강원교육의 자랑으로 삼고 적극 활용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고취하도록 학도병기념관 운영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A 교육국장 천미경 : 매년 6월 1일 추모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인 것도 알고 있음. 교육청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

Q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A 교육국장 천미경 : 코로나-19의 대안으로 원격수업을 준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음. 서둘러 인프라 구축도 하고 어떠한 형태든 대응을 했지만 실제 학생이나 교사나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음. 현재 대책을 세우는 중이며 새로운 대책을 17일에 발표할 예정임.

Q 강원교육복지재단 해산결정에 대해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A 기획조정관 강삼영 : 기자간담회 시 책임에 대해 말하였고, 현재 모든 업무를 교육청에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음.

Q 홍천~용문간 철도 사업방식이 일반철도로 시작됐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최종 단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된 이유는?

A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정부에서는 용문~홍천선이 지역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광역교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일반철도보다는 광역철도가 유리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였음.

Q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도 남아 있고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예측되는 절차와 과정은?

A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먼저 예타를 시작할 것임. 통상 절차대로 기본계획 수립 1년~2년,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약 3년 정도, 그다음에 공사가 착공되는 순서임.

Q 현재 강원도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사업으로 국토부에 요청한 사업은 5번 국도 홍천~춘천을 포함한 시설 개량사업 15건, 확장사업 2건 등 모두 17건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A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사업계획 고시 전 행정절차로 최종 단계에서 기재부의 사업성, 즉 B/C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 AHP 평가를 앞두고 있음.

Q UAM처럼 큰 규모의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첨단 분야에 강원도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투자의 안전성과 현재 진행 중인 시제기 개발 이후 확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업 시작의 배경은?

A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지난 3월, 정부 K-UAM 로드맵 발표를 보면 확장될 가능성과 실용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음. 미래가 유망한 신산업에 대해서 선투자할 계획으로 시작하였고, 더 발전해서 AAM과 다양한 특수목적 적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강원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반



신영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홍천1

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Q 271억 원 규모의 시제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까지도 수소 에너지 기반의 4인승 드론 택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4인승 상용기 개발사업도 참여할 계획인지?

A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리튬 배터리를 이용한 2인용 시제기를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액화수소 연료전지의 4인용 상용기 개발이 추진될 것임. 이후 특수목적용 개발이 병행될 예정임.

Q 컨벤션센터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비도 줄여서 B/C, PI 값을 올렸다고 봄,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악한 우리 강원도의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될 것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없다면 컨벤션센터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A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컨벤션센터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5세대 통신망을 통한 e-스포츠 전용경기장도 만들 계획이고, 또 다른 컨벤션센터에 없는 마스크 프리센터, 그리고 강원LIVE처럼 상설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1.6.15



최 종 희 의원
사회문화위원회·비례

Q 강원도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강원도를 떠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지?

A 일자리국장 백창석 : 구조적으로 임금 문제가 가장 큼. 수도권에 비해서 강원도의 임금이 약 82만 원 정도 적고 전국 대비해서도 한 40만 원 이상 적음.

Q 강원도에서 일자리재단을 출연시키고 강원형 일자리,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A 일자리국장 백창석 :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 전 면접, 자격증 취득 등 취직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에 3,700명 정도 했고 올해도 모집 중임.

Q 취직사회책임제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정규직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지원만 받고 나갈 경우 환수조치가 되는지?

A 일자리국장 백창석 : 1년간 지원해 주는 부분은 회사에서 1년간 약정하여 지원되며 1만 7,000명 중 계약직이 본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인원이 747명 정도가 됨.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성과는, 충분히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Q 강원도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국내 행정구역 가운데 인구감소 등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지역이라는 것인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A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인구가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이동과 자연적 증가 부분이 있음. 자연적 증가 부분은 도에서 육아기보수당을 포함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일부 소기의 성과도 있음. 사회적 이동 부분은 교통망 개선으로 수도권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음.

Q 현재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곳은 춘천과 원주뿐임. 강릉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한 쪽으로 치우치면서 한 쪽은 계속 인구소멸이 되니 문제라 보는데?

A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최근 기재부 발표에서 내년에 인구소멸 내용을 하나의 주요한 안건으로 삼아서 각 부처별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음. 그 부분을 열심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Q 최근 문제가 되는 차이나타운을 왜 유치하려고 하시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전국에서 중국에 투자가 제일 적은 데가 우리 강원도임. 제주도,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들어가 있음. 차이나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짜뉴스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함. 기업들이 하는 일이고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임.

Q 2020년 온라인 수업으로 학력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책 방안은?

A 교육감 민병희 :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A·B·C·D·E 5단계 중 E단계가 늘어난 것이 사실임. 중소도시, 읍·면 단위가 시 단위보다 중위권 학생수가 더 높음. 등교 일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성취수준이 더 높았다는 결론임. 한글교육책임제 또는 초등 협력교사제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잘한 결과로 보고 있음.

Q 지난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릉 회산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우리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는데 검토가 되었는지?

A 교육감 민병희 : 처음에 학교 신설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 순차적으로 유발된 학생을 명주초등학교에 계속 편입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 신설 학교가 추진되려면 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대규모로 해서 약 4,000명 이상의 유발 효과가 있어야 학교를 신설할 수 있음.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

Q 강릉시에서는 학교 학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대하게 학생 수요가 늘어났을 때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야만 학교예정부지로 지정할 것이 아니냐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이런 학교예정부지 공문이 와야만 예정부지 선정을 할 것이라고 함. 아파트 입주 시 특별법에 의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A 교육감 민병희 : 학교용지 조성은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시 학교용지를 포함한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게 되어 있음.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개발계획 협의 시에 학교용지 확보를 적극 검토함.

Q 아파트 신축사업자가 2,000세대, 5,000세대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어떤 말보다도 교육감님의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A 교육감 민병희 : 학교를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의로 올라가면 잘 진행이 안 됨.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법규의 문제임. 법규의 문제라서 저도 안타까움.

Q 2022 세계산림엑스포가 시기적으로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선과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데 9월이나 10월로 연기할 생각은 없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지금으로서는 정부 주무부서와 합의 후



심 영 섭 의원
농림수산위원회·강릉1

확정된 날짜임.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추진할 계획임.

Q 강릉 영동지역에 제2청사 관련 1차 설계예산이 내년도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A 도지사 최문순 : 영동지방은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제조업 등이 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함.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음.

Q 강원도립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존립의 문제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만 낭비할 거라고 보는데?

A 도지사 최문순 : 도립대학의 위상을 조금 더 높이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음. 좋은 안이 있다면 경직되게 생각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음.

Q 지난 5월 20일 교육부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였음. 1도 1국립대학교에 강원도립대학교도 같이 편입을 시켜주는 것은 지사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A 도지사 최문순 : 강원대학교의 김현영 총장이 추진 중인데, 강원도도 도립대가 거기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갖고 있음. 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한 금 석 의원
농림수산위원회·철원2

Q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2,555km²로 강원도 5개 군 행정구역 면적의 54%에 해당함. 지역별로는 철원군이 행정구역 면적의 99%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화천군이 64%로서 연간 자산가치 손실액은 8조 8,879억 원에 달하는데?

A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 그간 물가 상승이라든가 국방개혁 등을 감안한다면 지금 조금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함.

Q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4조와 제15조와 관련하여 보호구역 지정 시 반드시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는 민간인이나 전문가가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문가나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함께 논의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A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 동의함.

Q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규정과 관련하여도 민간인 전문가나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A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 알겠음.

Q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려면 정부 조직에 접경지역개발청이나 평화지역청을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A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 지난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었고 도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함. 다만 개발청 신설은 각종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함.

Q 군 소음 보상 현실화와 관련하여 지역대책위에서는 현재 80WECPNL에서 75WECPNL로 내려달라는 것인데,

민간공항 기준으로 봤을 때 75WE CPNL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도에서 적극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 보상 기준 군소음보상법과 민간비행장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민간 비행장 수준으로 해달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임을 알고 있음. 향후 관련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Q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빈 군부대를 활용한 공동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법과 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 전환 등이 있는데 농촌의 촌집보다 월등히 나은 시설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활용이 안 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농정국장 이영일 : 농업 분야 강원도형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올해 철원군의 시범사업인 가설건축물 설치 지원사업이 효과가 좋다면 내년부터 도내 전체로 확대하겠음.

Q 구리~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과 관련 신북~양문 13.3km가 확정되면 철원까지 13.2km가 남는데?

A 도지사 최문순 : 6월 중순에 1차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최선을 다하겠음.

Q 지난 3년에 걸쳐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규모가 제일 큰 사업 중 하나인 학습종합클리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A 교육국장 천미경 : 지금 학습클리닉센터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최근에 줄어드는 것 중의 한 가지는 기초학습지원단 인원수를 현실화한 것임. 그래서 인건비가 줄었고 실제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줄지 않았음.

Q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부터 복식수업, 협력교사제, 책임교육, 문해 등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집중이 되어있고 일부 사업은 초등학교 몇 개교 등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이 되고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범사업이 일부 학교만 대상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것인지?

A 교육국장 천미경 : 선도학교를 하는 경우는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준비 과정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학교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임.

Q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지역의 여건들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노력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A 교육국장 천미경 :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도 지원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협력기관들과 연결 시 부모님들이 낙인 효과 인식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음.

Q 주무부서와 관련 중·고등학교 때는 신체적인 2차 성징이 발생하면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한 접근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모든 연령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떤지?

A 교육국장 천미경 : 중·고등학교도 기초학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대상에 따라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 통



허 소 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춘천5

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급별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Q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학습 상담, 자기주도 학습, 예술심리 교육 등 도움이 될 만한 연수에는 인원수가 너무 적는데 전문 프로그램이나 지도 자료 부족 등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연수 프로그램 기획 시 이런 어려움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데?

A 교육국장 천미경 :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기획해 추진하고 있음. 추후에는 교사도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근본적으로 교사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면 좋겠음.

Q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4월 말 현재 10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황이고 예산은 6,800만 원 규모인데 이 예산이 우리 지역 사회의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지?

A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예산의 지원이 충분한가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적다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1.6.16



권순성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원주6

Q 신재생 등 지역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등 친환경 자동차, 녹색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 탄소흡수원, 물 순환, 저탄소 개발을 반영한 친환경 도시계획 수립 등이 중요할 것인데 어떤 이행 계획을 갖고 있는지?

A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총 3,443만 7,000t 의 감축 목표가 잡혀 있고 분야별로 보면 그린·액화수소경제, 그린모빌리티 확산, 화력발전 연료전환 등 총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가 있음. 후속조치로 신규사업 포함 약 1,660억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러 국비 신청 중에 있는 상태고,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Q 탄소중립정책 기초 확립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실행과제들을 잘 이행하려면 조직들이 필요함. 더 확대하는 부분은 이행과제 진행과 같이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음.

Q 탈 플라스틱 사회를 향한 대책 수립 및 플라스틱 원천감량, 생산량 감축, 재생원료 의무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생분해성 원료사용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실천력 확보를 위한 교육, 홍보가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A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쓰레기 사후처리 대책도 필요한 부분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과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임. 여러 가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임.

Q 수소저장 운송클러스터 예타보고서 보완 및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통보가 2021년 4월에 된 이유는?

A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강원도를 포함해서 5개 시도가 예

타 대상사업인데. 1차 미선정 통보는 작년 11월 2일에 있었음. 이유는 수소법이 금년도 2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 수소법에 따른 정부 수소경제 이행계획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에서 먼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통보가 왔음.

Q 2050 탄소중립국 선언과 관련 도의 산림분포를 보면 낙엽송이나 소나무, 잣나무, 침엽수, 참나무류, 자작나무, 활엽수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제수종 등 앞으로 수종을 많이 식재해야 될 텐데 특별히 구상한 것이 있는지?

A 녹색국장 박용식 : 강원지역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를 중심으로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해서 밀원수를 적극적으로 심고 있음. 마가목,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울타나무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33ha에 130만 그루의 식재계획을 가지고 있음.

Q 앞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A 도지사 최문순 : 기후변화, 탄소 중립, 산림일자리, 상하수도 절수계획 같은 것들을, 이 시대의 시대정신의 하나라고 생각함. 잘 따라가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좀 더 탄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음. 현재 2040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겠음.

Q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도내 확진 환자는 현재까지 총 3,370명, 시군별로 보면 원주·강릉·춘천·동해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인구나 수도권과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시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우선 춘천·원주·강릉 같은 경우 도내 확진자 수의 70% 이상 나왔는데 강릉 같은 경우 외국인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고, 원주는 유흥 종사자들 위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철원은 요양시설 집단 감염 등 지역 편차가 있음.

Q 강원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군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4월 1일에 한 경우도 있고 4월 15일에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유는?

A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지역별로 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춘천·원주·강릉이 먼저 설치됐고 이후 홍천이나 횡성 등 지역별로 예방접종센터가 구축되는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었음.

Q 강원도만의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이·통장 중심의 마을 방역과 직능별·업소별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성과는?

A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정부의 방역 기초는 지역에서 자율과 책임의 방역임.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했었는데 6월 14일부터 8인으로 완화 등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방역관 운영과 특히 소단위 마을의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있음.

Q 지난 3월 8일, 어렵게 다시 열린 러시아, 일본 바닷길도 시작하자마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최근 환동해 항로의 운항상황과 하반기 여객 운송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A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3월 8일부터 블라디보스톡과 마이즈루 항로를 주 1회씩 운항하고 있는데 DBS 운항 대비 화물이 50% 정도 감소한 상태임. 해운 쪽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 일본 돗토리현과 사카이항에 기항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 러시아 쪽도 화물 물동량



김형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동해2

확대를 위해 협의 중에 있음.

Q 플라이강원에 대한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운항장려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20년도 예산이 30억 남아있는 상태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목을 변경할 계획을 세워 놓고 편성한 게 아닌지?

A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활성화로 잔액 30억 원 충분하다고 보았고 하반기에는 새로 편성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앞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음.

Q 도로관리사업소의 지소 현장에 일반행정직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A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최근 도로유지사업,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업 외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증가된 반면 현재 기술직에 대한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Q 코로나 방역 대책 중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A 도지사 최문순 : 강원도는 다른 도와 달리 고령화 지수가 높고 흩어져 있는 지역이 많아서 도민들이 주체가 되는 방역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다른 도와 다른 점임.



제1차 본회의 / 6월 1일

- 국가 추진 SOC사업 중 철원권 사업의 부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 우선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해서 짚어보면, 정부는 2015년 8월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기공식을 하였으나, 이듬해 5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경원선 복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던 철원 구간의 전철화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사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그리고 철원~포천 고속도로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임에도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후순위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고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 또한 20년이 지나도록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 이밖에도 철원 오지~동송

교통분야 SOC의 변방, 철원!

최재연 의원
(교육위원회·철원1)

간 국도 8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간 국도 47호선 개량공사 등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까지만 사업이 완료된 후 철원권 구간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함.

⇒ 철원군민들은 강원도가 철원지역을 염두에 둔 지역개발사업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물론 강원도에서 철원군을 동서로 관통하는 463번 지방도를 대대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림. 철원군민들이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는 철원군 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 드림.

-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 지정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강원형 액화수소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필수요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 울산 등지에서 우리 강원도보다 앞서 추진한 수소 생산산업은 기체 상태의 수소 생산인 반면 우리 강원도는 액화수소 생산 중심임.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 대비 부피가 800분의 1이기 때문에 대용량 저장·운송이 가능하고 저장용기의 압력이 기체 수소는 900기압인 반면 액화수소는 대기압 수준으로 훨씬 안전함. 더욱이 삼척 호산항 일원의 LNG 인수기지에서는 액화천연가스가 기화될 때 -163℃의 냉열이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는데 이 냉열을 활용하면 수소액화 비용을 30%까지 절감할 수 있음. 이러한 장점이 강원도가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며 그 중심에

수소에너지경제 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전담조직 확대 개편

김상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삼척1)

삼척이 있음.

- 액화수소 경제는 열차, 선박엔진,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성장잠재력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겠음.
- 최근 강원도에서는 가칭 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고 있음. 발 빠르게 움직여준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림.

⇒ 향후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전담 부서의 확대 개편을 비롯한 선제적이며 과감한 지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현재의 비교우위를 더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수소산업 중심지가 강원도 삼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이 향후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할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제4차 본회의 / 6월 16일

탄소포집 산업 육성에 대하여

박인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강릉2)

○ 국내 시멘트 생산은 약 5,000만 톤으로 도내 업체가 국내 생산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은 연간 3,900만 톤 규모이고 CO2 발생량은 국내 산업 부분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시멘트 산업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생산 방식을 방지하고서는 강원도의 탄소중립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함.

- ① 강원도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의 포집과 저장 및 재활용기술(CCUS)을 적극 연구하고 채택하여 다량 온실가스 배출 공정과 업종에 적용시켜야 함.
- ② 중앙정부(특히 산자부)에서 탄소포집과 저장 등의 사업을 강원도가 아닌 다른 산업에 우선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 강원도에서도 tempo 빠르게 강원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과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사업

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 국회 등을 설득하여 시멘트 산업에서 우선적인 중앙정부의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③ 탄소중립 의지는 표명하였지만, 시간만 끌며 정부지원금만 요구하는 시멘트 업계의 요구를 듣는 한편 협력을 하여 실질적인 실천을 끌어내야 할 것임.
- ④ 또한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멘트 생산 대비 톤당 500원으로 하는 불확실하고 1회성으로 낭비되는 시멘트 기금을 단호히 반대하여, 일명 시멘트세라고 하는 지방세가 환경을 지켜내는 목적세로, 그리고 재투자되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도 이러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여겨짐.
- ⑤ 그리하여 CCUS가 조속히 접목되어 탄소를 잡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노력을 하여야 함.

-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 독도를 마치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표기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음.
- 더욱 화가 나고 황당한 것은 평창올림픽 때에는 올림픽 정신을 거론하며 한반도 기에서 독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IOC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에 문의하라'는 등 미온적이고, 평창동계올림픽 때와는 다른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 그리고 일본이 신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해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과 영토의식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자 한다는 점도 더더욱 우려스러움.
- 이에 범국민적·범정부적 차원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이번 일본의 독도 도발을 계기로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의 정책과

독도사랑 교육 중요성에 대하여

이종주 의원
(교육위원회·춘천2)

인식에 대한 재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 또한 독도를 입도하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거쳐야 하고 울릉도를 갈 수 있는 네 곳의 항구 중 두 곳이 강원도에 있다는 점에서 강원도 또한 울릉도·독도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독도교육에 관한 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독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타 시도의 경우 5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1개의 시·도교육청에 독도교육지원과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강원도도 조속히 독도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독도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 공공분야 갈등관리가 절실한 38국도 태백~삼척 간 건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태백 도계와 삼척 미로를 연결하는 38번 국도의 선형 불량구간 14.4km를 4차선으로 확장·개량하는 약 4,15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2007년 착공하여 진행되던 중 삼척시 신기면에 위치한 사찰과의 보상협의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불과 3.1km 구간을 남기고 공사가 중지된 이후 현재 3년 가까이 지나고 있음.
- 이 구간 갈등관계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간접비용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19건에 사망자 1명을 포함하여 16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포함한다면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움.
- 그동안 미개통 구간을 기존 국도로 우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교통사고와 통행 불편을 견디다 못한 지역주민들

38국도 공사 재개를 위한 강원도의 역할 주문



김상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삼척1)

- 이 최근에는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 및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갈등 주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38번 국도 건설공사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강원 남부권의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태백과 삼척을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이며, 4,000억 원 이상이 넘게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임.

⇒이에 강원도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주문함. 더 이상 38국도 건설 지연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고조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좌시하지 않기를 지사님께 당부드리며, 아울러 강원도 국토개발 분야 공공갈등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함. 우리강원도가 국토개발 분야 갈등관리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희망함.

- 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이 처음 제시했던 공약이며, 민주당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생각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함.
- 그러나 도정과 민주당의 평화특별자치도는 남북교류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협소한 개념의 특별자치도임. 지역적으로는 접경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업적으로는 당장 실현 가능성과 안정적 지속 가능성이 낮은 남북교류사업 위주에 머무르고 있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얼어붙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음.
-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올라가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과 남북교류 사업에 국한된 특별자치도가 아닌 보다 폭넓은 특별자치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의원은 허영 의원이 발의한 평화특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이념 넘어야



심상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동해1)

- 자치도법과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비교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두 법안을 같이 홍보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해왔으나 끊임없이 묵살당해왔음.
-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특별자치도 설치촉구 결의문 발표에 동의하지만 민주당식 평화특별자치도만 홍보하고 설치를 촉구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힘.

⇒지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특별자치도인가를 세심히 따져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람.

- 산림스포츠는 산림이 갖는 치유 효과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및 재활에 도움을 주는 신체활동이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등산을 비롯해 산악 걷기, 산악 자전거, 트레일런 등이 있음.
- 그중 유럽에서부터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트레일런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트레일런을 소개하자면, ‘트레일’은 오솔길·산길 등의 비포장 지면을 말하며, 자연 그대로의 길을 빠르게 아닌 즐겁게 같이 뛰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기는 파티라고 생각하면 됨.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트레일런 대회가 언택트 스포츠로서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각광을 받고 있음.
- 원주시는 최근 치악산둘레길이 5년여에 걸친 조성공사를 마치고 개통했으며 11개 코스, 139.2km로 명품 도보 여행길로서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 외지인들에게 벌써부터 인기 있는 걷기 코

산림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강화



조성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원주7)

스로 각광받고 있음.

⇒국제트레일러링협회 자료에 따르면 트레일러너 국내 랭킹 중 1위, 8위, 14위에 강원도민이 포진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홍보한다면 강원도가 트레일런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생각됨. 또한 다양한 산림 인프라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강원도의 강점을 살려 원주, 강릉, 인제 등 각 도시별 자체 사업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지역을 거쳐 개최되는 울트라트레일 몽블랑 국제대회와 같이 영서와 영동지역에 걸쳐 운영되는 챌린지 형식의 국제대회를 기획·조정하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는 2030 세대의 트렌드를 선도할 것임.

알기쉬운 정책·용어

P4G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 공공-민간 파트너십 국제협의체이다. P4G의 P는 참여(Partnering)를 뜻하며 G는 Green Growth, Global Goals 2030을 뜻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기존 유엔체제와 국가 중심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활동을 한다. P4G에는 스타트업, 스

케일업, 최우수 파트너십 등 3가지의 파트너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솔라카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30~31일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정의 실현하는 공정한 교육환경 이끌어



10대 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이종주 의원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걱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에 이 의원은 오늘도 학교 현장 구석구석을 누빈다.

춘천2 더불어민주당

이종주 의원



※ 위 사진은 코로나-19 이전 촬영된 사진임

독도교육 강조, 강원도 출발 독도 체험 활성화 촉구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성화 봉송 코스 소개 지도에 독도를 마치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전 국민이 논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도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지난 6월, 이종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도 수호를 위한 정책과 인식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이목을 끌었다. 국제적 로비, 외교백서, 교과서 개편 등 끈질긴 방법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독도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또 독도에 입도하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거쳐야 하고 울릉도로 갈 수 있는 4곳의 항구 중 2곳이 강원도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 교원 연수나 학생 독도 체험활동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조속히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전 무상교육, 공교육 강화 정책 마련에 집중

이 의원은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복 지원 규모나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도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이끌었다. 또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교복 구매 평균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책정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차별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에 깊은 관심이 있는 이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추진에 앞장서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고교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지만, 36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이 가장 늦은 나라이다. 게다가 민간 고등교육비의 부담률은 가장 높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조기 추진을 요구했고, 올해 완성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지난해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교 현장 누비며 실용성있는 정책 제안 앞장

춘천지역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퇴계동에 들어선 퇴계초·중학교에 발생할 문제와 쟁점 사안을 예측해 꾸준히 건의한 것도 이 의원의 꼼꼼한 현장 점검 덕분이다.

“교육청에서 세세하게 알 수 없는 학교의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예산을 신청하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도민과 교육에 꼭 필요한 정책, 실용성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 의원의 목소리에 희망이 넘친다.



사회적 약자 보듬는 제도 구축에 중점

원주6 더불어민주당

권순성 의원

권순성 의원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도민이 더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방안을 꾸준히 고민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강원도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

권순성 의원은 「강원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상속 채무로 경제적 위험에 빠진 아동과 청소년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무료 소송 대리, 각종 신청과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도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일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원수를 늘리고 전문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확대한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경기 침체로 인해 빈곤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에 청소년 쉼터를 열자고 주장해 사업에 반영되기도 했다.

“도내에 청소년쉼터가 운영 중인 지자체는 춘천 5곳과 강릉 1곳이 전부였습니다. 도내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고,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주에 청소년쉼터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실제로 개소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사용 저감 대책 주문

권 의원은 지난 28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사용 저감 대책과 지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 멀칭 필름구입이 지원되었고, 환경유해 물질이 토양에 잔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오랫동안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권 의원은 최근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조례에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처리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내 가축분뇨의 실효성 있는 자원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 지원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전자상품권 도입 추진,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 발의

최근에는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요즘은 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 전자상품권 도입을 이끌었던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문제, 장애인 인권, 사회에 나오지 않는 니트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





실질적 성과 내는 의정활동에 주력

교사 출신인 주대하 의원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와 지역 사회를 대변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싶었다. 체육을 가르쳤던 그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스포츠 인권 정책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속초1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의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조례 개정해 홍천, 양구까지 지원 확대

주대하 의원은 요즘 정치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있다. 도의원이 된 후 그가 3년 간 끈질기게 추진한 미시령터널 인접지역 주민 통행료 지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 의원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속초, 고성, 양양에 이어 실제로 통행이 적지 않은 홍천, 양구까지 통행료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은 터널을 자주 이용하는 홍천, 양구 주민에 대한 혜택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국도 이용이 줄면서 주변 상경기가 침체됐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을 통해 국도 이용 차량을 늘리기 위한 복안이었습니니다.”

스포츠 인권 강조, 청소년동계올림픽 조직위 영동 이전 앞장

주 의원은 스포츠 인권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을 막기 위해 강원도체육회에 스포츠인권팀 신설 등을 꾸준히 요구했다. 덕분에 도체육회는 도내 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도 인권센터와 협업해 스포츠폭력·성폭력 상담 및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내 스포츠계에서 불합리한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정부 지원 확대와 조직위원회의 강원도 이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발표하는 데에도 앞장서, 최근 서울에 사무소를 두었던 조직위원회가 영동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

의정 활동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중하는 그의 노력은 지역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속초의료원에 분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꾸준히 협의한 끝에 지난해 10월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갖춘 분만산부인과가 문을 열었다. 속초 동명항 방파제 개선, 속초·고성 산불 피해로 인한 중소상공인 보상 등도 그가 이루어낸 성과이다.

강원도민과 속초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시민을 만나러 나서는 주 의원의 미소가 미덥다.





홍천 발전 인프라 구축 위해 동분서주

천년의 역사를 가진 홍천에서 기차 여행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신영재 의원은 늘 꿈꾸어왔다. 철도는 홍천이 서울의 배후 도시로 도약하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신 의원은 군민들과 함께 철도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고 유치에 성공했다.

그는 오늘도 바이오산업, 물류산업, 드론산업 등 홍천이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홍천1 국민의힘

신영재 의원

용문~홍천 철도, K-바이오 중화향체 사업화 지원센터 유치 성과

신영재 의원은 요즘 힘이 난다. 오랫동안 끈질기게 요구해온 용문~홍천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신규 노선 중 가장 먼저 착공 절차에 돌입해 내년 상반기 중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60년 홍천군민의 숙원이었던 홍천 철도 유치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논리를 꼼꼼하게 제시했다. 또 도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을 주도했고 홍천군 철도 유치 염원을 담은 챌린지 프로그램을 적극 알리기도 했다.

K-바이오 중화향체 사업화 지원센터도 홍천으로 들어온다. 북방면에 위치한 강원인력개발원 부지를 활용해 면역-향체 분야 클러스터로 조성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억 원을 포함, 360억 원이 투입된다. 신 의원은 이 사업을 위해 유상범 국회의원과 홍천군과 발을 맞춰왔다.

홍천 자원에 기반한 물류산업, 드론산업 육성 위해 조례 제정

도내 물류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것도 신 의원의 성과다. 이 조례는 물류단지 지정 전에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해 강원도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물류단지 지정과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강원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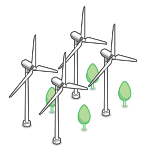
신 의원은 “수도권과 가깝고 가용 부지가 많은 홍천은 물류단지 개발의 최적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철도까지 개통되면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물류산업은 홍천의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를 것입니다.”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강원도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드론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도내 드론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이다.

신 의원은 최근 무궁화 육성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를 육성하기 위해 법률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강원도가 무궁화 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궁화 중심도시로 지정되었으며 독립운동가 남궁억 선생의 고향인 홍천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라 이목을 끌었다.

신 의원은 레고랜드 사업의 합리적인 진행과 알펜시아 매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 주장하며 도정 비판도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다. 날카로운 지적과 명료한 의정활동 덕분에 그는 도공무원노동조합이 선정한 베스트도 의원에 2019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폐광지 태백 변화 위해 동분서주



태백2 더불어민주당

김혁동 의원

10대 도의회에 들어오며 ‘손잡으면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노라 약속했던 김혁동 의원. 초심은 달라진 게 없지만, 스스로에 대해 ‘손잡고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외연을 더욱 확장해가고 있다. 강원도와 태백의 미래에 대한 시급한 고민들로 김 의원은 늘 분주하다.



폐광지 위기 극복할 액션 플랜 구체화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에는 위기가 찾아왔다. 폐광지역 인구는 1988년 44만 명에서 2019년 19만 명 아래로 쪼그라들었다. 석탄산업 축소로 일자리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파탄을 맞는 악순환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폐광지역의 위기는 김 의원이 10대 도의회에 입성해 줄곧 지적해왔던 사안이다. 그간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거듭 목소리를 내왔다.

“지역소멸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안사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나 강원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심각한 상황이죠.”

김 의원은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회 차원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는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담겼다. 또한 폐특법 등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호소도 들어있다. 김 의원은 요즘 폐광지를 머무르는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태백시 철암동에 위치한 광물자원특화단지, 장성전통시장 개선 등이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학교 통합과 분리 통해 교육 여건 개선

김 의원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교육기술직 공무원 출신 경력은 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에 자양분이 됐다. 강원도의 작은 학교들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소멸되기에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일. 김 의원의 열정과 노력으로 태백 학교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지역구인 태백 교육시설 예산 122% 증액, 학교 간 통합과 분리 작업은 그가 이룬 대표적인 성과다. 장성여중과 태백중을 통합해 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학교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태서초와 중앙초를 통합해 태서초를 새로 짓고, 황지초에 밀집된 학생들을 태서초로 나누어 교육여건을 개선했다.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이력도 김 의원의 강점이다. 사회문제에 두루 관심을 가져온 그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택배 노동자 건강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언을 하며 동료들의 공감을 받았다.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전범기업 공공기관 구매제한 조례」 제정에도 앞장섰다. 또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에 다가갔으며, 강원도 학생·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성 농어업인 복지와 지위 향상 기여

여성 농업인은 강원도 전체 농업인의 절반이 넘는다. 도내 식량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 농업인들은 남성 농업인의 조력자로 인식되는 등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다.

여성 농업인의 권익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신장되고 있는 여성의 권익보다 한참 뒤쳐져 있다. 지역 현장에서 이를 늘 지켜봐온 신명순 의원은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을 드러내 알리고 그들의 긍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영월2 더불어민주당

신명순 의원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 고령층 이동권 보장 대책 촉구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신명순 의원의 여성 농업인에 대한 긍지가 표현된 법이다. 이 조례를 계기로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여성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조례를 계기로 농정당국에서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예산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신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여성 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임기 내에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참이다.

신 의원은 도내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발의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면허증을 반납한 3,425명의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지원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원도의 취약한 대중교통 여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됐고, 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편한 행정에 귀 기울이고 지역발전에 앞장서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인 신 의원의 회의 출석률은 100%에 달한다. 그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함께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강원 남부권 지역 경제 회생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 외에도 도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에 대응할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주문하는가 하면,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상품권과 육아수당 지급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의정활동은 도의회 청사 안에서가 아닌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신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일상이 회복되면 더 밀접하게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신뢰감있게 다가온다.



Q&A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 윤석훈 의원 외 2인

Q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문 제제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A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생에게는 장학금 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정 형편이 어려워면서 평점 C학점 이상의 성 적을 받은,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퇴나 휴학하거나, 정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장학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특기생 장학금은 지난해부터 지급받는 사람이 없어 지급 조항을 없앴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발의 >> 윤석훈 의원 외 3인

Q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역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대학생에 한정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대학생 지원에 한정됩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의용 소방대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의용소방대원 본인이 대학생일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대학생 자녀를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조례 의 명칭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 권순성 의원 외 5인

Q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노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자수가 줄어들고 있 어요. 자원봉사자들을 우대하고 격려한다면 봉사자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텐데요.

A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을 격려하고 생활에 보탬을 주고자 제정되었어요. 먼저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 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시설이용료 등의 50%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병서 비스를 지원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 원금액 등은 시군별로 특성을 감안해야 해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발의 >> 권순성 의원 외 4인

Q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되는 채무를 받지 않거나 한정적으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 통계에 따르면 상속포기나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요. 이는 가계 빚이 예전보다 더 느는 등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지요.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요.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는다 해도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기 어렵죠. 그 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부모가 사망 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 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답니 다.

「강원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김병석 의원 외 6인

Q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야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은 경제적 자립여부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아직 자립하기 어려운 어린 청년들이 자립하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A 그동안 사회에서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2016)에 따르면 여성들은 주거의 어려움, 심리적 부담감 등을 호소했고, 남성들은 취업정보와 기술이 부족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례는,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자립종합지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조례 덕분에 퇴소 후 갈 곳 없이 홀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청년들이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위호진 의원 외 5인

Q 강원도에는 수산자원 조성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나 수산자원연구기관의 정의나 수산종자 분양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 종자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책이 있을까요?

A 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산종자연구기관’에 대해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수산종자의 시험연구 및 종자생산·분류,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했지요. 또 수산종자 분양은 유상이나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수산종자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수산자원과 종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발의>> 윤석훈 의원 외 2인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들이 늘며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에서도 이번에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상시 노동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노동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이 조

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정책 연구,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재해 예방 홍보 등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도민이 산업안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포상을 할 수 있다.

편집자 註: 제10대 강원도의회는 10개의 연구회를 두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10개의 연구회의 활동을 알아보고 비전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콘텐츠 개발로 시장 살린다

전통시장 살리기 연구회



전통시장 살리기 연구회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2019년 1월 29일 창립되었다.

윤석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김상용(더불어민주당), 김정중(더불어민주당), 김진석(더불어민주당), 박병구(더불어민주당), 박윤미(더불어민주당), 위호진(더불어민주당), 장덕수(더불어민주당), 윤지영(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통시장 살릴 정책대안 제시하고 사회 관심 유도 위해 창립

도내에는 무등록 시장을 포함해 75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7,000여 개의 점포에서 1만2,000여 명의 상인과 종업원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지역의 전통시장은 촌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통시장을 되살릴 복안을 찾고 의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살리기 연구회가 창립되었다.

전통시장 살리기 연구회는 전통시장 견학, 전통시장 살리기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며 도내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전라남도 여수의 전통시장을 견학해 벤치마킹을 하였다.

여수에는 여수 서시장, 중앙선어시장, 수산물특화시장 등 시장이 많고, 관광객을 흡수할 다양한 시장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100년 전통으로 이름난 서시장은 여수연안 여객선터미널과 여수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과 가까워 싱싱하고 다양한 수산물들이 거래되고 있다. 풍물거리에서 싱싱한 생선회를 바로 먹을 수 있고 곱창, 돼지머리고기, 족발 등 먹자골목이 유명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통시장연구회는 관광도시로서 관광지와 어우러져 특성화시킨 여수의 시장들을 둘러보며 도내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올림픽 레거시, 지역특성 콘텐츠 개발해 전통시장 활성화 강구

지난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강릉지역의 전통시장 관광 콘텐츠 개발과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의 비대

면 전략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해 전통시장 관련 정부 및 강원도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해 도내 전통시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외 우수 전통시장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림픽 레거시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도내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고용이 늘어나리라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강원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전통시장 살리기 연구회는 7월 6일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도내 전통시장이 각 시장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통해 되살아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회장인 윤석훈 의원은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통이 활발해진다는 의미이기에 연구회가 나서 시장을 살릴 복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살리기 연구회

등록일: 2019년 1월 29일

회 장: 윤석훈(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사: 정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회 원: 김상용(더불어민주당), 김정중(더불어민주당), 김진석(더불어민주당), 박병구(더불어민주당), 박윤미(더불어민주당), 위호진(더불어민주당), 장덕수(더불어민주당), 윤지영(더불어민주당)

도의회, 2021년 의정역량강화 교육

“
지방자치법 개정 등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강원도의회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년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 변화의 흐름에 맞춰, 실질적인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기법 등 지방의회에서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진행되어 관심을 끌었다. 또 32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에 따



른 도의회 발전방안,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정 홍보활동에 필요한 스피치기법 및 SNS 활용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곽도영 도의장은 “의정역량 강화는 개개인의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의회가 실력 있는 의회와 더불어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위원회 현지 시찰

“
강원국제교육원, 속초중학교
이전 예정 검토 부지,
강원진로교육원 시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연)는 강원국제교육원, 속초중학교 이전 예정 검토 부지, 강원진로교육원 등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였다.

먼저 강원국제교육원에서는 올해 1월 1일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속초



중학교 이전 예정 검토 부지를 방문하여 부지를 살펴보고 이전 가능성과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강원도 진로교육 전문 교육행정기관인 강원진로교육원에서는 학생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진로 체험 교육시설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하였다.



경제건설위원회 현지 시찰

“
강원디자인진흥원 방문,
4차 산업혁명 대비 주문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형원)는 6월 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후 도내 출연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를 시찰하였다.

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은 도 도시·건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건축과 도시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시찰한 강원디자인진흥원은 도시 디

자인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공공 디자인을 주도하고 도내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도 출연기관이다.

김형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디자인진흥원을 방문하여 “4차 산업혁명, 스마트산업 등 시대적 흐름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디자인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자인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정유선 의원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
공동체역량 증진 부분
최우수상

정유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월 2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된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공동체역량 증진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지방정치 혁신과 성숙을 촉진하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확산하기 위해 지방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공모대회이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한국일보,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 후원한다.

정 의원은 여성, 청소년, 청년 관련 분야의 입법 활동과 정책 수립에 특히 집중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도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06. 01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제자리 찾기 대정부 건의문 발표



06. 03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
업무협약식

06. 07

자치분권
열린 포럼



06. 04

제301회
사회문화위원회
현지시찰



06. 08

강원도 재난현장
전문 자원봉사단
출범식(스카이컨벤션)

06. 08

강원도체육회 법정
법인 출범식



06. 10

상지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식



06. 14

신임 춘천지방검찰청장
검사장방문



06. 14

다문화사회연구회
간담회

06. 15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회





운곡 원천석 유적 태종대

스승 찾아온 이방원 발길 돌린 러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과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의 스승이었던 운곡 원천석과의 설화가 남아있는 유적이다. 원천석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인으로 조선 건국 초기 선비들이 변절하던 시절에 고려조에 대한 절개를 끝까지 지켰다.



태조가 조선을 세우고 그의 아들들이 피비린내 나는 왕권 다툼을 벌이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치악산에 들어가는 은둔 생활을 했다.

태종 이방원은 즉위한 뒤 젊은 시절 스승이었던 원천석에게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고 그를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1415년 이방원은 옛 스승인 원천석과 정사를 의논하고자 스승이 은거하고 있다는 강림리를 찾았으나 스승은 왕이 된 옛 제자와의 만남을 꺼려 몸을 숨겼다. 스승이 머문다는 곳 가까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처음에는 이곳을 잠시 말을 멈춘 곳이라는 뜻의 주필대(駐蹕臺)로 불리었다 태종이 머물렀다 하여 태종대라 부르고 비석과 정자를 세워 기념하고 있다. 현재의 태종대는 1984년에 해체·복원한 것이다.

태종대를 찾는 사람들이 흔히 지나치는 일 중에 바위 위에서 주변 경치만 보고 바위 아래 새겨진 '태종대(太宗臺)'라는 글을 지나치는 것이다. 색바랜 글씨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며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왕의 애환을 느끼게 해준다.

이방원이 노파에게 스승이 간 곳을 물었다는 빨래터 노고소, 이방원이 포악무도하게 정권을 탈취한 것은 스승인 원천석 자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한탄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횡지암, 이방원이 만나지 못한 스승을 향해 돌아가면서 예를 갖추 절을 했다는 배향산에 대한 설화가 함께 전해지고 있다.

문정공 조충지석

거란족 막은 대장군의 묘지 지석

고려시대 문신 문정공 조충(1171~1220)의 지석(誌石)이다.



지석은 후일 봉분이 유실돼 분묘를 잃을까 염려해서 준비해두는 것으로,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묘소의 위치 등을 기록해 무덤에 묻어놓는 판자 모양의 돌이다.

조충은 고려시대 때 거란족을 막은 대장군으로 유명하며 시호가 문정공(文正公)이다. 본관은 횡성이며 고려 명종 원년(1171)에 태어나 고종 7년(1220)에 50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부친 영인, 아들 계순과 함께 3대가 장수 중 가장 높은 계급인 원수(元帥)를 지냈다고 해서 '삼원수(三元帥)'로 불린다.

원래 조충의 묘소는 개성군 상도면 연동에 있는 고려 태조 왕비의 제릉 서쪽 기슭에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실묘(失墓)되었다가 도굴이 성행하던 일제강점기에 수난을 당해 지석만 남아있던 것이 1926년 발견되었다.

개성에 있던 조충의 묘소는 광복 이후 38선으로 남북이

갈리게 되자 장차 통행이 끊길 것을 염려한 후손들이 1948년 지금의 자리인 횡성군 우천면 정암리 산207-1번지(덕고마을1길 12)로 이장했다. 이때 지석도 함께 옮겨 묻었는데 1988년 10월 묘역을 정비하면서 지석이 확인됐고 1989년 5월 1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0호로 지정됐다.

지석의 재료는 청석(靑石)으로 가로 89cm, 세로 55cm, 두께 4cm이다. 표면을 거칠게 다듬어 앞면에만 글을 새겼고 가장자리에 덩굴무늬를 돌렸다. 글자 크기는 1cm 정도이고 1행 41자 전체 50행으로 필체에 힘이 있으면서 담담한 기운이 느껴진다. 전체가 네 조각으로 갈라지고 파인 곳도 많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어려운데 선대(先代) 가계(家系), 조충의 생애, 인품과 일화, 가족관계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충지석은 횡성 조씨 문중에서 보관·관리 중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

비운의 어린 왕 단종이 잠든 곳

조선 제5대 문종이 재위 2년 4개월 만에 승하하자 12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능이다.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청령포에 유배되었다가 17세에 죽임을 당하고 그 주검이 동강에 버려졌다. 단종이 죽임을 당한 후 시신을 거두면 삼죽을 멸한다는 어명이 있었다.



정자각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었는데 당시 영월호장 엄홍도가 그 시신을 거두어 지금의 장릉에 모셨다.

단종이 죽고 240여 년이 흐른 숙종 때(1698년) 이르러서야 단종이 왕으로 복위되고 왕릉으로 정비하면서 묘호를 단종으로, 능호를 장릉이라 하였다. 장릉 주위는 멋진 소나무로 빼곡한데 하나도 곧게 자란 나무가 없다. 모두 능을 향해 절을 하듯 굽어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자아내게 한다.

장릉은 왕릉인 것에 비해 소박하다. 특히 문인석만 있고 무인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칼을 든 자인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장릉에 얹힌 사연은 슬프지만 장릉의 탁 트인 풍경과 넓은 초지는 눈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어린 단종이 누워서나마 좋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음에 안도하는 사람이 많다. 장릉 안에는 왕릉 외에도 단종역사관, 재실, 단종비각 등 둘러볼 거리가 많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홍도를 기린 '엄홍도정여각'도 장릉 정문 나가는 길 왼편에 있다.

2009년 6월 30일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가까운 곳에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가 있는데 이 또한 비운의 역사를 담고 있으나 풍광이 좋으니 함께 둘러보면 좋다.

동강 어라연

천혜의 비경 품은 동강의 보석

영월읍 거운리와 문산리 사이를 흐르는 계곡으로 동강에서 풍광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문산리에서 완만하게 흐르던 물길이 어라연에 이르러 급하게 물길을 바꾸면서 천혜의 지형이 생겼다. 구불구불 흐르는 곡류천, 침식 작용으로 생긴 하식애, 계곡의 협곡, 소(沼)가 이루는 풍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물길이 돌아가는 자리에 들어선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세 개의 바위섬 절벽에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은 한 편의 수채화 같다.

어라연은 물 반, 고기 반이라 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고 물고기의 비늘이 비단결처럼 반짝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월로 유배를 왔던 단종의 혼령이 이곳의 뛰어난 경치에 반해 이곳에 머물러 하자 물고기들이 줄지어 반기는 바람에 이 일대가 물고기 비늘로 덮인 연못처럼 보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어라연 잣봉(537m)은 어라연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산으로 등산로가 짧아 가볍게 오를 수 있다. 동강 생태 탐방로를 따라 비포장길을 호젓하게 걸어도 좋고 래프팅을 하며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짜릿한 어라연을 즐겨도 좋다.

어라연 지역은 식생이 다양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어름치, 수달, 원앙, 황조롱이 등의 야생동물이 집단 서식해 생태적 보존가치도 높다.

어라연은 정선과 영월 산지에서 벌목된 소나무를 서울로 운반하는 중요한 물길이었다. 어라연 아래 여울은 물살이 심해 뗏목이 부서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는 사고도 많았는데 실제 이런 이야기가 정선아리랑 가사에도 나온다.



2021년 월별 회기운영 일정

월 별	회 기	예 상 안 건	비 고
계	140일 이내	(정례회 55, 임시회 75, 예비회기 10)	
2월	제297회 임시회 2.17. ~ 2.26. (10일간)	■ 신년연설(도지사, 교육감)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사찰 등	2.12. 설날
3월	제298회 임시회 3.16. ~ 3.25.(10일간)	■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등	3.1. 삼일절
4월	제299회 임시회 4.7. ~ 4.15.(9일간)	■ 청소년도의회 운영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사찰 등	4.16.~5.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5월	제300회 임시회 5.6. ~ 5.21.(16일간)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사찰 등	5.5. 어린이날 5.19. 부처님 오신날
6월	제301회 정례회 6.1. ~ 6.16. (16일간)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사찰 등	6.6 현충일
7월	제302회 임시회 7.6. ~ 7.15.(10일간)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사찰 등	7.8 도민의 날 행사
9월	제303회 임시회 9.2. ~ 9.10.(9일간)	■ 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행사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사찰 등	9.6 1956년 제1회 강원도의회 개회 9.21. 추석
10월	제304회 임시회 10.5. ~ 10.15. (11일간)	■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어린이도의회 운영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사찰 등	10.3 개천절 10.9 한글날
11월·12월	제305회 정례회 11.2. ~ 12.10. (39일간)	■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 병행) ■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사찰 등	
필요시	예비회기 (10일간)	■ 긴급 임시회 소집 또는 기존회기 연장 운영	

2021년 의회 일정 보기

Calendar



07

2021 JUL

제302회 임시회 7.6. ~ 7.15.(10일간)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303회 임시회 9.2. ~ 9.10.(9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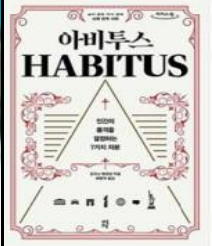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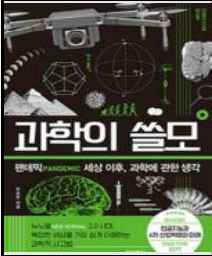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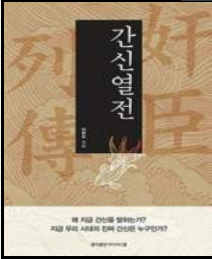
2021 SEP

09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 달의 추천 도서

도서 제목 및 저자 (출판사)	내용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 이진우 (인플루엔셜)	매 순간 선택을 강요하는 집단과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균형을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이라고 정의했다. 이 '중간'을 선택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이 목적을 나침반 삼아야만 매 순간 부딪치는 문제들로부터 방향을 잃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아비투스 도리스메르틴 (다산북스)	아비투스는 프랑스 철학자 부르디외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을 일컫는다: 내가 속한 계층, 사람, 취미, 과제가 나의 아비투스를 만들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다. 습관보다 근본적인 개념인 아비투스를 바꿔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방향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노력을 한다면 아비투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과학의 쓸모 전승민 (체인지업)	이 책은 과학 저술가의 책답게 다양한 과학기술의 세계를 매우 평이하고 쉬운 글로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치게 될 다양한 과학 기술에 대해 시민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교양 수준의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미리 엿보게끔 해주는 재미도 제공한다.
 엄마의 마지막 말들 박희병 (창비)	생의 마지막에 놓인 엄마의 곁에서 엄마의 일상을 관찰하고 엄마와 주고받은 말들을 기록하고 있다. 엄마의 말은 대개 경상도 사투리로 된 짧은 문장들이다. 엄마의 마지막 말들, 은유와 환유, 상징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저자는 인문학자답게 그 말들에 담긴 뜻을 해석한다. 가족의 삶의 역사에 대한 추억, 호스피스 병원의 현실에 대한 긴 비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간신열전 이한우 (홍익출판미디어그룹)	간신의 역사는 인간 역사의 시작과 함께 탄생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간신은 '신하'라는 신분의 문제보다는 야심이 많은 표리부동한, 사악한 사람이라는 '유형'에 가깝다. 전통사회에서 제기되던 고정관념으로서의 간신론을 해체하고, 현대사회에 맞게 재구성된 간신 개념을 갖고 역사를 뒤훑은 간신들의 실상과 문제점을 짚어낸다.